

데스크 시각

한국정치의 희망 어디에서 찾을까



김 일 환
편집 부국장

최근 서울과 대구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 행사의 만찬장에 모인 이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로 흘렀다. 서울 언론인은 “대구에서 집권당 후보가 아닌 누구와 누구가 선택받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2개의 야당이 경쟁하고 있지만 또 집단 투표가 예상된다며 선거 변별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구 언론인의 생각은 달랐다. “집권당이 힘이 있어야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동력을 얻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 언론인인 필자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선

택의 중심에 섰던 광주가 지켜 온 정신, 광주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선도했던 그 선택의 위대함을 강변했다. 토론은 계속됐지만, 지역마다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뿐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정치 토론에 답은 없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공감하는 터라 결론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용기 있는 도전에 박수

이렇듯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마다 다르다. 특히 영·호남 지역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지역주의 광국병이라 비판하지만, 그 장벽은 엄연하게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떨치지 못하는 망령처럼 되살아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한국 정치 후진성의 지표’라고 말한다. 영호남이 지역 중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말인즉, 여야가 각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사라지고 그 결과 혁신이

나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리다 보니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주의에 기대는 선거 운동을 서슴지 않았다. 당 대표가 나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당연히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지역에 기댄 당 바람몰이에 더 신경을 썼다. 지역주의 선거의 고질병이 어김없이 재현된 것이다. 물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지난 보선에서 이정현 새누리 후보가 이 지역에서 당선된 것이 기록제이기는 하지만 19대 총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의미 있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새 정치는 시대적 소명

영남 지역 일부 야당 후보가 선전을 펼치고, 호남에서도 여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용기 내어

도전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오늘 밤이면 유권자들의 신성한 선택의 결과가 나온다. 당선이든 낙선이든 이들의 선전은 두고두고 이야기되겠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들의 노력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남은 여당, 호남은 야당’이라는 고착화된 인식을 깨부수고, 나아가서는 광국병인 지역감정의 벽을 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이가 그 길을 도전할 수 있게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년이면 민주화 30년을 맞는다. 더불어 정치에 지역주의가 등장한 지도 30년이다. 한 세대를 지날 만큼 우리 정치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야누스의 얼굴을 보여줬다. 새로운 세대로의 도약 시점에 새로운 정치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 말은 지역주의라는 여둠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번 총선이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은편칼럼

과학기술로 개발도상국 꿈꾸는 네팔



박 행 순
카드만두대 객원교수·전남대 명예교수

을 웃돌고, 116편의 포스터를 포함한 600편의 논문을 3일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발표하였다. NAST가 배포한 소책자에 의하면 네팔 정부는 UN에서 분류한 48개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분류에서 벗어나 2022년까지 개발도상국 진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작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진도 8.1과 7.9의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We build back bett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건을 넘어서 전재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적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네팔의 현실이 우리나라가 1997년 IMF사태를 맞고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 했던 시기와 비슷하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위기탈출과 함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필요가 절실했듯이 지금 네팔이 그런 때이다. 나는 개발도상국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네팔의 과학기술인들,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한국 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것이 사명처럼 느껴졌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IMF 사태까지의 한국 시대별 상황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육성법’이 제정되고 5년 단위의 3단계가 각각 어떤 목표로, 어떤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2018년에 끝나는 마지막 단계의 비전은 양성이 동등한 기회와 책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과 필자가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동한 많은 사진들을 빠르게 넘기면서 박진감있게 설명하였다.

한국정부의 이런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그 잠재력 활용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에 일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였고 네팔 정부 역시 자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지원, 육성하여 개발도상국 진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한국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 실현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깊은 관심들을 나타내었다. 여성은 전체 인적자원의 절반이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성, 가정경제를 운영하면서 자연적, 또는 필연적으로 습득한 리더십, 창의성, 관리능력 등을 가정과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임과 동시에 필요이기도 하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성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 고

광주역사 바로 세우는 4·19발상지 역사교육관 건립



이 병 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있다. 1929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항일 독립운동을 전국화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1960년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원인 광주 3·15의거와 4·19민주혁명, 1980년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그것이다. 광주 3대 민주항쟁의 역사는 발상지가 광주의, 주역이 광주민중이요, 격전지가 광주라는 공통점과 함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광주의 기질적 특성이 투영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4·19 역사가 바르게 관리되어오지 못한 이유는 5·16 이후 군사정권이 30여년 지속하면서 4·19역사는 역사의 음지에 묻혔고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문민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 민주화 초석을 놓은 4·19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기 3·1운동과 함께 국

가 간의 역사로 관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란 관리되지않고 기억되지 않으면 진흙 속의 진주와 같고 역사를 잃어버리면 반성도 혁신도 할 수 없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선인의 경구가 있다. 헌법전문에 명기된 4·19역사는 광주가 시원지인 역사문화 유산이요, 광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인 광주정신이요, 광주 정체성의 자산이다. 4·19혁명의 시원은 1960년 자유당 독재정권이 자행한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다. 광주 민주당원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1960년 3월15일 낮 12시45분 선거 참관을 포기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광주시민 1000여명과 함께해 금남로에서 구도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경찰과 충돌해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가 일어난 후 3시40분에 마산에서도 민주당원과 시민이 합세, 경찰과 충돌해 총격 및 투석전으로 사망자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다. 광주 민주당원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1960년 3월15일 낮 12시45분 선거 참관을 포기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광주시민 1000여명과 함께해 금남로에서 구도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경찰과 충돌해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가 일어난 후 3시40분에 마산에서도 민주당원과 시민이 합세, 경찰과 충돌해 총격 및 투석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때 행방불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11일 마산 앞 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 발견되어 전국민들의 흥분이 극에 달해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돼 4·19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광주 4·19역사는 광주역사관리 부실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광주 3·15 및 4·19 주역들과 그 기념사업회는 물론 4·19발상지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화원들이 공감, 광주 4·19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뜻을 함께해 4·19 발상지 역사관련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4·19민주혁명 발상지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을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 역사관 건립장소인 광주고등학교에서 4·19발상지 역사교육관 건물 착공식이 열린 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건물은 3층으로 연건평 251평으로 7월 말경 준공될 예정이다. 콘크리트 공사 완공까지는 2018년으로 광주시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질 때 위대한 4·19역사관이 탄생되어 광주역사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4·19발상지 역사교육관이 완공 개관 운영되면 광주가 헌법전문에 명기된 4·19역사 시원지로서 역사적인 위상을 높히게 될 것이다.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주항쟁역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광주 정체성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광주 정신과 민주성지 광주위상과 시민의 자부심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또 자랑스런 광주역사가 바로세워져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의향의 도시로, 민주화도시로, 세계 속 민주성지로서 우뚝서 광주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社 說

호남과 한국의 미래,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오늘 4·13 총선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전 국 1만3천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달 31일부터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가 총력전을 펼쳤던 후보자들은 마침내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총선은 지역과 국가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호남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으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맞았다. 호남 혼돈의 시작은 지난해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전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대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당권·대권 분리론’을 폈지만,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대권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던 주류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경선 불거지 변경하며 치러진 레이스 결과 문재인 대표가 승리했고 ‘호남 정치’는 문을 닫아야 하는 난관을 맞았다.

에 안간힘을 썼다. 또 나라에 빠진 민생을 자극해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세운 쇄신책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과 운동권 세력이 복귀한 비례대표 후보 파문 등 잇따른 실책으로 또 한 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지역구 공천자 다수가 문재인 측근으로 포진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급기야 문 전 대표는 선거 직전 두 번이나 호남을 찾아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에 이르렀다.

나라 운명을 좌우할 한 표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더민주 양당정치의 폐해, 보수와 진보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새 정치를 표방하며 지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받아들인 호남민의 지지를 수도권까지 확산시켜 강력한 제3당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호남 정치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차대하다. 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둔 마당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심각한 지도부 갈등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더민주-국민의당은 야권 주도권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총선 후 형성될 정치 지형은 오로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도로 피폐해진 민생과 억울 일로 인 경제, 굳어만 가는 남북관계 등 숏한 국정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 실패를 두려워한 국민이 마음을 열고, 빈부 갈등 해소와 민족 화해 협력이라는 ‘시대대선’에 부응하려면 어느 정치세력을 밀어 줘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후 투표장을 찾아야 한다.

‘친노 패권’이 부른 녹색 돌풍

지난해 4·29 광주 서구를 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방 참패의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후 천정배-박주선-박준영이 각각 신당 창당을 모색하던 중 안철수 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탈당함으로써 분당은 현실이 됐다. 올 2월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를 확장했다. 문 전 대표의 무기력한 리더십과 친노 패권의 폐해는 국민의당 조기 정당의 자양분이 됐다. 그제야 위기를 실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났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총선 국면에서도 국민의당 기세가 심상치 않자 더민주를 표창원·양향자 등 신진인사를 영입하고 정정래·이해찬·최재성 같은 친노 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지지를 만회

후를 공식 승인한 날도 1949년 4월 13일이었다. 7년 동안 철권통치를 하던 전두환이 권력을 내려놓기로 한 날도 29년 전 오늘이다. 전두환은 1987년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을 유보하고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꼭 1년 뒤 4월 13일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정당 명예총재직을 사퇴해 모든 공직을 내려놓았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도 인연이 있다. 2000년 4월 13일엔 제16대 총선이 실시됐는데 투표율 57.2%로 당시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자의 41%가 초선일 정도로 몰락이 심했고 시민단체들이 지역감정 조정 및 부패 무능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 대상자의 69%(59명)가 떨어졌다. 다시 총선일이 밝았다. 이번 20대 총선에는 12년 만에 호남에서 두 개의 야당이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여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2016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無 等 鼓

가장 가슴 아픈 일은 1592년 그날에 일어났다. 명나라 정벌을 위한 길을 빌려 달라(征明假道)는 명분으로 왜구가 부산에 쳐들어온 것이다. 13일 새벽안개를 틈타 왜구 700여 척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부산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 사냥을 나가 있었는데, 적선이 바다를 까맣게 덮었다는 보고에도 조공하러 온다고 판단해 대비하지 않았다.

역사 속 4월13일

4월 13일은 특히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족적을 많이 남긴 날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하고’라는 대목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도 1919년 그날이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1945년 김구 등 유인들이 환국할 때까지 독립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했다. 로마교황청이 한국 정

표율 57.2%로 당시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자의 41%가 초선일 정도로 몰락이 심했고 시민단체들이 지역감정 조정 및 부패 무능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 대상자의 69%(59명)가 떨어졌다. 다시 총선일이 밝았다. 이번 20대 총선에는 12년 만에 호남에서 두 개의 야당이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여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2016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행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